

전남 미래산업에 국비 2103억 투입…주력산업 재편

도, 석유화학·철강·조선 위기 대응…탄소중립·고용 안정 병행
이차전지·첨단바이오 확대…광양만권·국가산단 산업 전환 본격

전남도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탄소중립 규제 강화에 대응해 지역 주력산업 재편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기존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이차전지·첨단바이오 등 신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국비 2103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산업 안전과 환경 대응, 고용 안정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반 자원 순환 시범단 구축(30억원), 산단형 초

임계 CO₂ 발전 사업화지원센터 구축(54억원), 선상용 CO₂ 포집 기술개발 및

실증(55억원) 사업이 추진된다. 기술 고

도화 분야로는 무탄소 연료 기반 석유화학

NCC 공정기술 개발(83억원), 미래 모빌

리티온 고분자 공중합체 제조 기술개발

(55억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지역산업 위기 대응 지원(179억 원)과 석유화학·철강 고용 안정 사업(165억원)을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조선산업 분야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자가 공세로 인한 경쟁 심화에 대응해 생산 혁신과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낸다.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

산·제조 기반 구축(22억원), 암모니아 연

료공급시스템 유통 실증 기반 구축(26억 원), 목포·여수·광양·영암 수리조선 인프

리를 활용한 함정 MRO 클러스터 구축(24억원) 등이 포함됐다. 전남은 이를 통

해 친환경 선박과 유지·보수 분야에서 새

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시용 후 배터리 증

가에 대비해 전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한

다.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160억원),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사업(60억원), 해양

배터리 특화 데이터허브 플랫폼 구축(20억원)이 추진된다. 내년 광양만권 첨



전남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정기총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4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25년 전남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사진제공=전남도

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연

계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첨단바이오 산업은 천연물 기반 신약과

차세대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부터 사업화까지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7억5000만원), 디지털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70억원), 펫타이드 첨단신약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62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광양 공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60억원),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5억원) 사업도 반영돼 산업·과학

인프라 확충이 병행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정부 정

책 기조와 연계해 전남 산업 구조에 맞는 핵심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고용을 함께 지켜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노후 상수도 기반시설사업 미래형 전환 시동

특광역시 첫 배수지 전환·노후관 정비 등 국비 339억 투입

동북댐 조류 발생 원천차단 설비 설치…수돗물 품질향상

광주시가 노후 상수도 기반시설 미래형 전환 사업에 나선다.

이는 노후 상수도 기반시설 보수를 넘어 상수원 관리·중간 저장·조절 거점 확보·공급망 정비로 이어지는 상수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각화정수장 배수지 전환·동북댐 조류 대응,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 3개 사업에 국비 339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각화정수장 배수지 전환,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에

국가재정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은 상수도 안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수돗물 품질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폐쇄된 복구 각화정수장은 배수지 중심의 핵심 기반시설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227억원 중 국비 113억5000만원을 확보해 기존 정수장 기능을 배수 지로 전환하고, 1만6000m³ 규모의 배수지 전환,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에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비상 상황 시 최소 12시간 이상 응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배수지 상부 공간은 균일공원과 생활 체육·휴식 공간으로 조성돼 도시 녹지 확충 및 주민 이용 편의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동북댐에는 조류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설비가 설치된다. 광주시는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억원씩 확보한 데 이어 2026년 예산 10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2026년까지 수중폭기기 35기를 설치해 물순환을 촉진하고 녹洲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여름철 원수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국비 216억원을 확보했다.

시비 50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1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추진된다.

노후 관로 누수와 싱크홀 발생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예방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용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광주시는 물복지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국비 확보는 그 결실로, 앞으로도 유수율 향상과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여순사건 일부 유족 ‘형사보상금’ 떼일 위기

소송 변호사가 대리수령해 일부 전달하지 않아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때일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상금을 떼일 처지에 놓은 여순사

건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였던 여순사건 유족들이 또

다시 보상금 혐의이라는 2차 피해를 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유족들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 심모 변호사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무죄 판결로 유족 3명이 받아야 할 형사 보상금을 대리 수령해 전달하지 않고 있다.

전체 보상금 7억2000만원 가운데 약 3억원만 지급받고, 4억2000만원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 변호사는 지급 혐의서까지 써가며 수십차례 지급 기일을 통지했다가 이행하지 않기를 번복했다.

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문 업무 등으

로 큰 보수를 채야 할 회사가 8개월간 지급을 지연하는 바람에 형사 보상금 지급도 어려워졌다고 물려왔다.

유족들은 심 변호사와 형사보상금에서 중계 역할을 맡은 B씨(진상구명 명예회복 추진협의회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족들은 “해당 변호사는 40년 이상의 여순사건 보상금 소송을 대리하고 있어, 전체 피해규모가 최대 8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한 여순사건순천유족회 권애임 이사는 “이 사태는 보상금 대리수령을 사실상 방지해 온 제도, 변호사 보수·정신을 관리하지 않는 구조, 소송 종개·알선 행위를 차단하지 못한 법의 공

백, 보상금 지급 이후 국가 책임을 ‘사인 간 문제’로 떠넘긴 행정의 부재가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권 이사는 “여순사건을 포함한 과거사·국가폭력 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유족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상금은 개인 계좌가 아닌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신탁·에스크로 계좌를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순사건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은 “과거사 청산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제도와 법률로 완성돼야 한다”며 “유족 보상금 횡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법을 위한 즉각적 인 압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광주전남 통합’ 서 계속

법안에 따르면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는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설치된다.

국가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행정기구 설치, 사무권한, 보조기관 직급 등 행정·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록했다.

또 통합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조례·행정행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통합 광역단체장과 의회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 특례 규정도 함께 담았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고, 내년 7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공식 출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직접 선출에 기반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통합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초광역 행정체계 전환을 도모했다.

정 의원은 “인구·일자리·교육·문화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에서 개별 시·도 단위로는 더 이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광주전남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광주·전남이 선도 지역이 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더 큰 국책사업, 더 과감한 국가 지원을 이끌어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해 물질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이 국가 주도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